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주실업대책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광주시민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전북연대회의, 군산지역빈민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서울경인지역사회복지학과학부학생회연합,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민모임,  
성남참사랑복지회, 시민연대회의, 실업극복강릉시민연합, 실업극복위한시흥시민간단체협의회,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인천본부,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포항시민운동본부,  
실업대책을위한범국민운동경남본부, 실업자종합지원서울센터,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안산지역실업극복운동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협의회, 빈민여성연합,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성공회나눔의집, 열린사회시민연합, 예장전도부특수선교위원회,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 주거권실현국민연합,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실업자연대(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직노숙자대책중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좋은사회시민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  
제주법도민회, 천주교시화일꾼복지관, 충북·청주지역실업극복시민사회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자활지원센터협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종교개사회사복지대표자협의회,

간사 조학원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056 팩스: 723-5055

천리안 nation21 / 전자우편:nation21@chollian.net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귀중

발 신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송경용 신부, 간사 조학원 723-5056)

제 목 3조 8천억 원의 세수잉여금을 빙곤층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라

날 짜 2000년 2월 11일(총 2쪽)

## 성명서

### 3조 8천억 원의 세수 잉여금을 빙곤층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라

• •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로 편입된 이후로, 극심한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적 고통의 하중이 우리 사회의 빙계재층에게 가장 강하게 집중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이들 빙계재층은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을 구가하는 동안, 성장의 과실 분배라는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계층에 해당하기에 그 고통의 심각성이 중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짚어져야 할

책임이자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작년 8월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으로써, 빈곤층을 비롯한 전체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 하지만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 10월 이전까지 빈곤층의 생계대책은 여전히 막막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 법의 정신과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의료보호 제도를 포함한 보건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부조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 비판하는 대로 '무늬만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빈곤층 지원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동시에 경제관료 등 일부에서 여전히 반(反) 사회통합적 입장을 지닌 채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세수잉여금 3조 8천억 원을 빈곤층 지원정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빈곤층 지원정책이 빈곤층의 생계안정과 자립자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제대로 사용되는가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0년 2월 11일  
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